

여야, 3차 추경 공감대...“고강도 재정대응”

역대 최대...민주 김태년 “유동성·고용안정 방파제 역할” 통합 김종인 “재정 역할 커질 수밖에...협조할 수 있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어서 3차 추경 국회 통과에 정진호가 켜졌다.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을 편성,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히 준비하는 게 낫다”며 “유동성과 고용 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은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을 넘어서는 고강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은 물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내수 활성화 및 무역금융 확충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추경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

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3차 추경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내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심정을

갖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될 경제·사회 제반의 여러 상황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를 통해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

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예측이 잘못돼서 1차·2차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보다 엄청난 거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 기간 올해 예산 중 20%를 절감, 코로나 대응 재원으로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좌관 밥샘대기’ 박광은,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

사회적 가치법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의안번호는 ‘2100001’로 등록됐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했다.

국회 의안과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이 주말이어서 이날 오전 9시에 법안 접수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

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박광은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헌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미래통합당은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은 총 27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및 국회 개혁 법안을 포함해 총 15건을 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국회 출장 온 지역공무원에 의원 회의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 을)은 국회에 출장을 온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의원실의 회의실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의원회관 836호실 회의실을 ‘무등 사랑방’으로 명명하고, 국회에 출장 온 광주·전남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 사랑방에는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프린터 등이 설치됐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의 국회 출장이 잦지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광주·전남 공무원들이 국회 내에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랑방을 오래전부터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별도기구 방안 추진

‘발목잡기’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사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은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현행 법사위 구조를 고쳐 쓰기에 너무 멀리 나아간 상황”이라고 설명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예산 당국의 의견까지 모두 포함해 논의를 모두 정리한 뒤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기술적 검토에 특화된 의장 산하 특별 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해당 상임위의 결의를 거쳐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국회법에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돼 있다.

법사위에 사전 검수, 이른바 ‘데스킹 권

한’을 부여한 것은 법조 출신 의원들에게 법안을 촘촘히 들여다보게 해 법적 완결성을 기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은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도 이를 법사위에서 계류시켜 여당을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해왔다. 이를 두고 여당은 발목잡기, 야당은 권력 견제라며 맞서왔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개선안은 야당 몫이라는 법사위의 ‘케이트 키퍼’(문지기) 역할을 무력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정은 의원은 또 “이러한 제도를 뒷받

침하기 위해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법안소위는 복수로 뒤 월 4회 이상 각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국회를 상설화하는 대신 하계와 동계 한 차례씩 휴회 기간을 정하자는 의견도 회의에서 나왔다.

한 의원은 “추진단은 내일 국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징계 절차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의결해 1호 입법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삼석, ‘인구소멸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위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각종 지원정책도 반영되었다. 인구소멸위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한 인구소멸

위지역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 의무화 등 지역 보건료 개선 기반도 갖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www.woori-hospital.com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www.woori-hospital.com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